

〈특별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국 : 유사점, 차이점, 전망¹⁾

Ernst Nolte*

독일과 한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1945년 이후 두 나라의 역사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국가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양국간의 공통점은 분단 그 자체에 있는 것도, 그리고 아직 그 분단이 종식되었다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은 역사속에서 흔히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특히 20세기에 빈번히 일어난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쿠르트족은 오스만제국이 붕괴한 이후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조속한 시일내에 끝나리라고는 대담한 낙관론자들조차 예언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스페인에 대항하여 싸운 북부 네델란드의 자유항쟁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두개의 국가, 즉 네델란드와 벨기에의 성립을 결과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두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연합군이 승리함에 따라 다시 신속히 하나로 통합되었다.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이 글은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세미나(1997년 10월 8일)에서 놀테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본인의 허락하에 번역한 것임.

그러나 구 드골(de Gaulle)지파와 구 비시(Vichy)지파간의 격렬한 대립은 전자가 후자를 공격하는 거의 일방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내전에서 패한 한 측이 한 섬을 요새로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두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대항하는 반식민지봉기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후 1954년 잠시 분단되었으나, 토착세력이면서 세계강국인 미국의 지원-그것도 내키지 않은 형태의 지원-을 받았던 내전의 한 측에 대항하는 장기적인 유혈투쟁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였다. 오스트리아는 1945년 이후 몇년간 점령지로 나뉘어졌으나 다행스런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로 곧 하나로 통합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오직 독일과 한국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승리한 연합국들에 의해 역사적 시각에서 혹은 심지어 오직 지리적인 이유에 의해 점령지역들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1985년에도 미군은 독일의 경우 예전의 서쪽 점령지였던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에 그리고 한반도의 경우 38도선 이남의 민주적인 남한에 주둔하고 있으며, 반면에 소련군의 수습개사단은 독일의 동쪽 점령지였던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에 병사(兵舍)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간의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초기에 확연히 드러난다. 독일은 패전한 주적국(主敵國)으로서 그 점령은 무엇보다도 독일이 다시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방지하려는 연합국들의 벌칙과 예방책이었다. 이에 반하여 1910년부터 일종의 일본식민지였던 한국은 당연히 “자유화”되어야 하였다.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의 한 부분씩을 점령하였을 때 그들은 일본지배의 해체를 단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쳐야만 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독일인들이 분노에 신음하거나 절망하는 패전국민들의 감정을 느껴야 했다면, 모든 한국인들은 환호하는 공동의 승전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명백하게 확연히 드러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동부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도망쳐 온 수백만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서쪽

지역의 대다수 독일인들은 소련군의 복수-사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데 매우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베를린이 봉쇄되었던 1948~49년에 독일주민과 미군은 소련이라는 하나의 적의 공격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동맹국으로까지 느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민족자결의 전제조건으로 연합국들이 5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공표되자마자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로부터 격렬하고도 적대적인 반응이 표출되었다. 그 결과 “해방된 자”와 “해방자”간의 조화는 더 이상 거론될 수 없었다. 또한 독일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 즉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커다란 전승국들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기 조차 한 인생관과 이념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서도 이미 초기에 확연히 나타났다. 소련군은 한국인 가운데 소련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철저한 이념교육과 강도높은 군사교육을 받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한국인들을 함께 데려 왔다.

그들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유명한 민족영웅인 김일성의 이름을 따라 지은 한 소령이 있었다. 미군은 9월초에야 비로소 한반도에 진주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소련군은 알려진 대로 벌써 8월 15일까지 북쪽의 전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쪽지역 뿐만 아니라 거의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민위원회”를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의 주도아래 구성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연합하여 심지어 한국 전체를 “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은 인민위원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자국의 이해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점령지 내에 있는 위원회들을 즉각 해체시켰다. 그러나 그 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북쪽지역에는 위원회들이 활동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양쪽 지역에는 이미 초기에 심각한 정치적 차이가 부각되었다.

서독에서는 단지 몇가지 점에서 인민위원회와 유사했던 형태가 존재했을 따름이었다. 또한 소련군이 함께 데려왔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지휘하의 이주자들은 매우 소규모의 집단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전쟁포로수용소에서 공산주의나 소련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사병과 장교들은 숫적으로나 이념적 확고함에 있어서 “소비에트-한국인들”과는 비교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공산당이 해방당이나 통일당으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던 반면, 독일에서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의 사회민주당원들과 대중적인 감정의 합세에 의해 초기부터 “러시아당”으로 공격당하고 버려졌다.

물론 독일의 공산주의자들도 전후 초기에 서독의 “분열자”들에 대항하여 격렬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분단을 초월하려는 의도로서 “국민회의” 운동을 추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49년 10월 국가전립시에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1948년에 이미 남한에서 비밀선거를 통해 인구상으로 북한보다 많은 남한인을 포괄하는 의회와 정부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선언한 바와 같이 동독에 하나의 전국가적(全國家的) 성격을 부여하겠다고는 결코 생각치 못하였다.

한편 1948년에 구성된 남한은 유엔위원회의 통제하에 실시된 자유선거가 행하여진 곳에서 건국된 말하자면 유엔의 국가였다. 국가수반에 취임했던 이승만(Syngman Rhee)박사는 이미 금세기 초에 일본에 대항하는 자유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도 한국 전체의 대통령으로 예견되어졌다. 그러나 이승만이 남한에서 관철하고자 한 방법들이 미국인들의 눈에는 충분히 민주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그와 연령이 비슷하고 처음부터 전적으로 “서방” 지향적이었던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와는 달리 점령군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확고히 맺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베를린, 다시 말해서 타방 혹은 타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 타국영토로 둘러싸인 지역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정이나 합의가 불가피한 베를린과 유사한 것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미국인들이 1945년에 서베를린 입성을 거부하고 그들에 의해 점령되었던 구 동독의 주였던 튀링겐주와 작센주를 보유하였더라면, 독일의 두 국가는 계속 분리된 채 각자의 발전의 길을 걸었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실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독일에서도 양쪽 지역간의 모든 교통망과 우편연결까지도 차단되었을 것이라

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쉽게 전쟁으로 전화(轉化)될 수도 있었던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전쟁을 막아 주었다. 즉 소련의 점령지역 내에 위치한 혹은 서독의 선전에 따르면 “독일적인 것도 민주주의적인 것도 아닌” 소련 점령지역내 동독에 위치한 “미국적인” 서베를린의 존재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에서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재통일당”을 구성하였고, 초기에 최소한 시도적으로나마 국가 전체의 성격을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을 동독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항상 하나의 단순한 요구사항에 머무르고 말았던 “모든 점령군의 철수”가 한국에서 1948~49년에 실현되었을 때, 서독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졌던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 사이에 관철하였던 유일당지배의 강력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인 것이 이룩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였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미국인들은 이승만의 “비민주적” 지배에 동의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소련과는 달리 “그들의” 국가에게 중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개적으로 한국이 자국의 방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내전을 시작하였을 때 모든 카드는 그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동베를린에서 독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부에게는 이 순간 한국은 독일의 미래상을 위한 모델이 되었으며, 발터 울브리히트는 8월 3일 한 대중집회에서 환호 속에서 분리된 부분인 서독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도발의 소굴”이 청산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개입, 이어 중국의 개입으로 하나의 큰 전쟁으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국제전이 되었던 이 내전은 한국과 독일이라는 두 분단국가의 상황을 거의 비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형의 내전은 아무리 강한 이념적 대립에서 비롯되는 상처·증오라 할지라도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증오를 한국민에게 남겼다.

1953년 이후 동독에서도 선거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그 곳에서는 북한

에서와 같이 100%의 지지가 나타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발터 울브리히트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20세기의 영웅”으로 추앙되었던 김일성과 같이 신에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한 적도 없었으며, 다른 한편의 정권에 대한 증오와 욕설이 북한이 한 것과 같은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소련에 대하여 고유의 민족공산주의적인 이념을 내세운 것과는 달리, 동독은 동맹국인 소련에 대해 독자적이고도 상당한 정도의 긴장을 내포하는 관계를 결코 설정할 수 없었다.

한편 서독에서는 남한에서와 같은 군사쿠테타나 군사독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1968년 서독의 “학생폭동”은 비록 그로부터 “적군파”의 테러리즘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1960년 이승만을 무너뜨리고 1980년 광주봉기를 일으켰던 남한의 학생시위와 비교할 때 그것은 전혀 무해한 현상에 불과하였다. 1983년 랑군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다른 쪽의 정부요인에 대한 암살은 독일에서는 결코 상상될 수 없었다. 또한 편지의 왕래조차 전적으로 차단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1961년 8월에 건설된 베를린장벽조차 무슨 그리 큰 문제였겠는가! 물론 베를린장벽 밑으로도 터널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탈출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군사분계선 아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뚫은 터널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공격 준비용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체결 이후 한국과 독일사이에는 유사점 보다 차이점이 더욱 부각된다. 서독과 동독간의 대결은 항상 “냉전”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적 내란”으로도 불리워질 수 있는 냉전은 서구 혹은 “자본주의” 쪽에서는 조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호전성(好戰性)으로부터는 아주 거리가 먼 “유순한” 형태의 반공주의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점은 적대적인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루시초프나 호네커가 “긴장완화기”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했던 모든 승리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서방과 경제적 유대의 강화는 간과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체제를 “자유화시키는”-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표현을 빌자면 체제를 “부패시키는”-영향들은 이러한 유대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내의 갈등은 “동”과 “서”간의 “냉전”에 포괄될 수는

있으나, 그 보다도 과격하고 전체주의적이며 현저하게 광신적인 한편의 정권과 그보다 훨씬 덜 경직적인, 그러나 장기간 분명하게 독재적인 체제였던 다른 한편간의 민족적 내전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한국간에는 많은 유사성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한 분단국가의 정부가 전체를 대표하려는, 그리고 자신의 구도에 따라 떨어져 나간 다른 부분과 재통일을 추진하려는 요구를 점차 포기하는 것이 역사적인 도약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한국은 1953년 이후 수십년간 서독보다 훨씬 뒤처졌다. 이 점은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해질 수 있다. 이미 1955년에 콘라드 아데나워는 소련정부의 모스크바 방문 초청에 응하였고, 그 결과 양국간에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서독의 건국후 6년만에 외교적 무관계(無關係)상황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아데나워의 이러한 걸음은 사실상 강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소련이 “전범”으로 유죄판결—그 과정은 상당히 수궁하기 힘든 것이었지만—을 내렸던 10,000명에 달하는 잔여 독일군포로 송환의 전제조건으로 양국간의 상호적 인정을 요구하였으며, 독일 국내적으로도 이들의 귀환요구가 강력한 여론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독일에는 본 뿐만 아니라 동베를린에도 외국대사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로서 비공산주의 국가들도 동독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추축군대 후루시초프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아데나워는 즉각 이 소련의 성공적인 협박이 가질 수 있는 파급적인 영향을 차단하기로 결심하였고, 그 결과 아데나워의 가까운 동료이자 후일 “유럽공동체”의 의장이 된 발터 할슈타인(Walter Hallstein)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할슈타인-독트린”이 탄생되었다.

할슈타인 독트린은 서독은 소련만을 예외로 하고 동독을 승인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외교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독이 어떠한 이른바 동구권 국가와도 외교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동맹국가들은 물론 NATO국가들도 이들이 동독을 인정한다면 기존관계를 단절할 의지가 있음을 의미하였다. 서독정부는 서독만이 자유선거에 기초하여 독일 전체—즉 전쟁이전에 독일이 맺었던 협

정들이 평화협정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그 국제법적 효력이 지속되는 한 1937년의 국경선을 가진 독일-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입장이 두 “초강대국”이 희망되는 긴장완화를 파괴하고 “복수주의”를 조성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서독의 경제적 비중이 이미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동독은 그 후 10년간 오직 공산주의 국가들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졌다. 단지 1965년 까지 아랍국가들만 여기에서 예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독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포로만이 소련이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전후에 생성된 유럽에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강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었다. 그것외에 두번째의 수단, 더욱 강력하고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단, 즉 베를린이 있었다. 1958년 11월 후루시초프가 발표한 “베를린-최후통첩”으로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고, 1962년 소련제 유도탄의 쿠바 배치가 추가적인 압력수단으로 쟁점화 되었을 때 동서는 거의 전면 핵전쟁의 문턱에 이르렀다.

베를린장벽의 건설은 독일에게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그것의 후유증이었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 전체에 관한 “전승4개국지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의미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당시 베를린시장이자 후일 연방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한 의회연설에서 서방동맹국들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 구멍이 난 조약의 법적 상태를 방어하지 않고 단지 서베를린주민들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 어떠한 낙담적인 느낌을 주었는가를 “무대가 비었다”는 감동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이번에는 “새로운 동방정책”이 점진적으로 정립되었다. 이 정책은 브란트의 가까운 동료였던 에곤 바(Egon Bahr)가 정강정책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접근을 통한 변화”로 개념화되어 순식간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서독의 “유일대표성주장”이 포기되고 동독

이 두번째의 독일국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수 많은 “작은 걸음”이 분단된 독일주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소외감에 역작용하여 언젠가 “평화와 자유” 속에서 재통일이란 “큰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예를 들어 서베를린 거주자들의 동베를린 방문을 가능하게 한 1963년의 통행협정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966년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大聯政)이 구성되고 빌리 브란트가 외무장관이 되었을 때 동국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할슈타인-독트린은 점차적으로 포기되어졌고, 연방수상 쿠르트 게오르그 키징어(Kurt Georg Kiesinger)는 심지어 동독정부와도 접촉을 가졌다. 물론 그는 동독을 “국가”가 아니라 “현상”으로 표현하였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1969년의 총선에서 서로간에 대항하기 보다 민족중립적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항하여 이 정당을 유효득표율 5% 한계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사민당과 자민당간 “사회자유적” 연정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빌리 브란트가 연방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정부선언에는 “독일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두 국가는 서로간에 외국이 아니다”라는 매우 독특한 문구를 담고 있었다. 이로써 소련이 오랫동안 요구한 하나의 “국가”로서의 동독에 대한 인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두개의 국가성”이란 수용은 같은 문구내에서 동시에 다른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만약 서독과 동독이 서로간에 “외국이 아니라면” 그들은 매우 특유한 관계속에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서독의 오랫동안의 요구인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보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베를린장벽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국경감시시설”에도 불구하고 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상당히 많은 숫자의 모든 탈주자들은 계속해서 서독의 시민권을 즉각 취득하였고, 동독의 독자적인 시민권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부선언의 본문장에 확정된 옛날의 원칙들이 아니라 부문장에 규정된 새로운 확정들이었다. 이로부터 예곤 바에 의해 협상된 1970년과 1971년의 “동구조약들”이

도출되었다. 이 조약들은 서독과 소련, 그리고 서독과 폴란드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미래의 평화적인 재통일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도, 폴란드에게 전쟁후 동독과 폴란드간의 국경선이 된 오데르-나이쉴-국경을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도 아니었다. 1972년 서독과 동독간에 명문화 된 “기본조약”은 이러한 일련의 조약작업들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근 20년동안 서독의 정치와 지적 삶 속에는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하나는 점점 더 강해지는 반면 다른 하나는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 하나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좌파에 의해 대변되는 경향으로 “긴장완화”로부터 하나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만들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의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동독에 대한 유보없는 인정과 함께 독일의 “두개의 국가성”에 대한 요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적 제국주의”의 계획에 대항하는 소련의 “평화정책”-그것이 전적으로 방어전의 형태만은 아니었지만-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좌파 지식인들의 주동기는 독일내 두개의 국가성이 “민족국가”의 불행했던 전통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결별함과 동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되었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일”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속죄를 의미한다고 확신한 데 있었다.

또 하나의 경향은 형식적으로 1982년 이래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수상아래 기민당과 자민당 연합의 집권 연방정부에 의해 결코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서, 1949년 이래로 동독에 대한 서독정부 정책의 바탕이 된 대부분의 원칙들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란트와 바를 떠나 아데나워로 돌아가는 하나의 분명한 “전환”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의 “동방정책”이 신임의 노련한 외무장관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 Dietrich-Genscher) 아래서 좀더 강조된 채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정통성이 있는 외국 국가원수의 방문때와 어떠한 차이도 없이 1987년 가을 에리히 호네커가 본에서 영접되었을 때, 이제 독일에서 두개의 국가성이 영원히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독일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동독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소련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

혁명정책에 대하여 거의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고, 반공산주의적 노동조합인 “솔리다리태트”가 새로운 폴란드정부에 참여하고, 또 다시 대규모 탈주자들이 동독을 떠나고, 헝가리가 그들중 일부에게 “철의 장막”을 통과하는 길을 열어주기까지에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머지 탈주자들은 바르샤바와 프라하 소재 서독대사관에 몰려 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때까지 서독이 독일전체를 대표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 순간에 서독은 자국의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세계 TV 방송국의 우호적이면서도 화려한 조명속에서 극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이 모두가 알듯이 독일 재통일의 서곡이었다. 재통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개방된 이후 오직 소련과 서방 강국들의 단호한 거부조치에 의해서만 멈추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일어나지 않았다.

관찰자들은 서독정부가 대단히 노련한 이중전략, 즉 소련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동독에게는 막대한 차관을 보장하여 경제적으로 서독에 종속시키고, 서방동맹국들에게는 재통일요구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말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통일을 아무런 위협부담없이 지지해도 괜찮다고 믿게끔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표면적으로 단지 말뿐인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으로부터 1989년 11월 18일 콜 수상의 “10개항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인 재통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열기 넘쳤던 정책이 추진되었다. 만약 여기에 현명함과 노련함이 개재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한 사회체제의, 즉 그 체제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노선이 양립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그 중에서 단 하나를, 그것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노선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민주적 사회체제의 현명함과 노련함일 것이다.

한국에는 10,000명의 전쟁포로, 분할된 베를린, 더구나 아우슈비츠에 비견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긴장 완화”의 과정과 “화해”의 경향,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결코 공식화 된 적은 없었지만 사실상 쌍방에 의해 단호하게 실천되었던 “할슈타인-독트

린”의 해체도 찾아볼 수 있다.

한쪽 정부만이 아니라 다른쪽 정부에 의해서도 재통일을 위한 제안들이 거듭 내놓아졌지만, 그것들은 서로간에 전혀 양립되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 새로운 상호간의 비방으로 귀착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80년에 민주적 연방제 형태의 “고려공화국” 창설을 제안하였고, 그 얼마 후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은 북쪽의 적수가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대하였다. 수 차례에 걸쳐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1990년 9월에는 양쪽 국무총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얼마 뒤에는 “화해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양쪽간의 냉혹한 폐쇄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간첩선” 혹은 “무장공비”의 발견에 대한 보도는 수없이 많았다.

중요한 변화는 남한이 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1990년대 초에야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 이미 얼마 전부터 북한과 두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 사이에 나타난 긴장의 고조와 맞물려 있다. 이 두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주체”사상으로 변형된 이른바 순수 맑스-레닌주의라는 북한에 의해 “수정주의자” 내지 “교조주의자”로 비난되어졌다.

북한정권이 동독보다도 얼마나 더 강력하고 결의에 차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더구나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행정책의 위협으로 심지어 미국까지도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할 만큼 압박한데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동독은 그러한 정책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조차 못되었다. 따라서 모든 재통일 요구와 화해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두개의 국가성은 더 고착되었고, 독일에서와 같이 재통일의 가능성을 예시하는 어떠한 의미있는 유사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1987년 말 독일의 상황을 일견할 때 이와 거의 유사한 판단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 말해졌다는 사실을 유의할 것을 환기하고자 한다. 모든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민주공화국인 남한 사이에는 근본적인 유사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1961년 내지 1963년 이후 확실히 형성된 것으로서, 다른쪽 국가의 계획경제적 정권보다 두 나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공히 보여준 우월성이다. 생산수치나 수출량에 있어서 현재 남한은 1985년 서독이 동독을 능가한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독일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가졌다. 왜냐하면 동독보다 서독이 소련에게 훨씬 더 능력있는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소련과 동독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었고 마침내-대충 간략히 표현하자면-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동독을 “사들일” 수 있었다.

한편 남한은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인들이 소위 남한이라는 “분리국가”와 외교적 관계를 수립한 “배반한” 동맹국들에 대하여-이를 통해 수십년간 동독에 의해 “두개의 독일론”이 지지되었던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 형성되었을 따름인 데도 불구하고-분노를 격발케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세계정치상의 특별한 요인들과 적지 않은 우연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그 “두개 국가의 현실” 위에서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독일과 한국간에 분명히 부분적일 뿐인 유사성 속에서 10,000km란 지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하나의 비슷한 재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 역사가는 예언가가 아니다. 그는 앞서의 경우에 대해서 단지 유사성은 존재하되 차이점도 두드러져, 특정한 미래의 가능성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예견할 수도, 분명함을 가지고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어진 모든 유의점을 고려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판단을 신중히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재통일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국의 재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한이 중국과 현재의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 이들이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북한의 “매각”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보호자로서 두개의 강국에 의존하고 있어 하나에 의존했던 동독과는 다르며, 동독이 소련으로부터 가졌던 독립성 보다 상대적으로 일찌기 더 큰 독립성을 두개의 강국으로부터 누렸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북한정권은 동독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고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데 상당한 준비작업이 되었던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여행과 우편왕래, 나아가 TV를 통한 북한주민들과 남한주민들간의 연결이 결여되어 있다. 동독주민들이 “서쪽의” 넘치는 상품공급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서독주민들보다도 상품에 대한 욕구가 더 강렬했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 그렇게 고립되어진 주민들의 인내력은 한계에 달하여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념적으로 각인된 의지도 터무니없는 인내라는 주민들의 각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1948년이나 1961년과는 달리 벌써 오래 전부터 남한측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해져 있고, 남한만이 오늘날 재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은 북한정권의 완전한 붕괴는 어렵고 역시 상대적으로 질서있고 괴를 흘리지 않는 과도기도 독일에서처럼 거의 1년정도 따를 것이다. 동독의 경우에 특정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항상 배제되었던 전쟁으로 북한이 절망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경우에는 진실로 파국을 맞게될 것이다.

독일의 경험을 비추어서 나는 오직 하나의 좋은, 그리고 앞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해결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독일에서도 하나의 제안으로서 상당기간 동안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으나 상황의 전개에 따라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즉 북한정권이 체면유지의 마지막 가능성으로 수용한 “연방제”이다. 그러나 그 연방제는 남북 양쪽으로부터 동일한 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국회의 주장과 같은 낯고 너무나 속이 들여다 보이는 북쪽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야 한다.

한국의 양쪽 부분에 좋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다른 길을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다. 독일인으로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재통일 이후 독일현재의 시간이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좋은 시절이기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언급되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된다.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한국의 미래전망에 대해 하나의 좋은 근거를 가진 발언을 가능케한다. 그것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사이에 거의 전세계에 알려진 독일에서의 현실이기도 하다. 독일의 재통일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모두 다 계산하더라도 1947~48년의 마샬플랜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많은 비용을 서독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비용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소비생활로 흘러 들어갔다. 왜냐하면 구 동독을 “저임금지역”으로 간주하여 그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생각할 수 없고, 더구나 자유이주가 허용되고 난 뒤에는 비현실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건설 초기의 대규모적인 동원력이 사라진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 노동이 세계시장조건 하에서 생산적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를 보장해 주는 계획경제체제의 바로 그 단점이 뒤돌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점이며, 즉 사회적 보장 혹은 “안전”이란 장점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사회적 국가의 “자본주의적” 체제에서는 실업자라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경험에 의해서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때문에 사람들은 “머리 속에 있는 장벽”의 존속을 자주 말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재통일 이후에 독일인이 “하나의 행복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탄스러운 사실에 대한 주원인의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들이 “정상적인 민족”이 더 이상 될 수 없었고 정상적인 민족이기를 원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국민”으로 낙인 찍히는 데서 피학대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상당부분의 독일인들은 거의 피상적인 “유럽적인 것”으로 도피하였다. 이제 독일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마저도 가지고 그들이 재통일의 비용을 소련에게만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치루어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재통일의 수상은 확신에 찬 유럽인으로서 그 비용을 분명히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지불하였다. 즉 자국의 화폐와 자국 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심지어 자국의 정책도 “유럽공동체”안에 포기하였다.

만약 이러한 “암흑으로의 도약”, 유럽연합의 공동화폐인 “유로”의 도입이 수 많은 개개인에게 소득과 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야기시킨다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심각한 소동이, 심지어 정부전복 행위까지도 예견될 수 있다. 그러면 재통일은 생각컨대 동독을 애도하는,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동독향수자”들에 의해서만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를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통일된 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격차를 고르게 하고 50년간 거의 완전하게 단절되었던 정신적인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내가 옳게 본 것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민족의식이 크게 손상당하지 않았고,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유럽공동체에 비견할 수도 있는 “대동아공영권”이란 이념이 아무리 변형된 형태로 제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이 어려움을 독일인보다 훨씬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단일민족이었던 한국인은 그러므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독일과 한국에 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미래전망에 관해 발표한 나의 간략한 조망을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의 표현으로 끝맺는다.

(번역 : 손기웅 박사)